

사회

‘학생수’ 기준 획일적 배정 ‘교사 대란’ 우려 했는데 ...

전남 교육 황폐화 현실로

교사 714명 줄어 ‘기간제’ 대체 50억 투입
법정교사 정원을 80% → 70%대로 하락
학급당 학생·상치교사 급증 학습여건 악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도입한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교사 배정 방식이 전남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본보 2009년 10월 27일자 1면)가 현실이 됐다.

특히 목포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늘어난 학급당 정원수 때문에 5개 공립 고교에서 1학급씩을 줄였다.

전남지역 초·중·고교의 학급수도 지난해 1만1천117학급에서 올해 1만 671학급으로, 446학급이나 줄었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교원정원 축소 수 있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전남처럼 농산어촌·벽지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예외규정을 뒤 기준 학급수 기준으로 재전환하거나 가장 ‘농산어촌·도서벽지 교사수 우대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께 일하고·함께 돌봐요” 제10회 남녀고용평등 주간을 맞아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광주여성노동자회원들이 여성취업자의 출신휴가와 육아휴직 권리 확보를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을 기존 ‘학급수+학생수’기준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35%에 이르는 전남은 초등 290명, 중등(중·고교) 424명 등 714명의 교사가 줄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적은 반면 학급수는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년 전남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사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서구청 ‘관권 선거’ 전방위 수사

검찰, 사무실 압수수색

광주 서구청의 ‘관권 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구청 공무원의 불법 당원 모집 및 선거 홍보물 제작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해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 일지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전주 서구청장의 경선준비 사무실, 서구 정보홍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어 전 청장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31일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청장의 전 수행비서 이모(42)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일부 공무원이 선거용 정책홍보물 제작 과정에 참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무원들이 당원모집이나 선거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한편, 서구청 기획감사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제정할 예정이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의원 예비후보 2명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 중간조직책에게 1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김모(5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와 지지자 등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박모(44)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답답하긴 마찬가지...”

천안함 생존 승조원 회견...실종자 가족들 실망

7일 천안함 생존 승조원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광주·전남 출신의 실종자 가족들은 “생존자들도 힘들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날 생존자들의 증언과는 별도로 향후 생존 승조원들과의 만남을 갖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극성 출신 실종자 정종용 중사의 아버지 정해근(63)씨는 “이번 생존자 기자회견은 군 당국이 사고 직후부터 해왔던 말을 되풀이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함께 배에 탔던 동료마저 실종자 가족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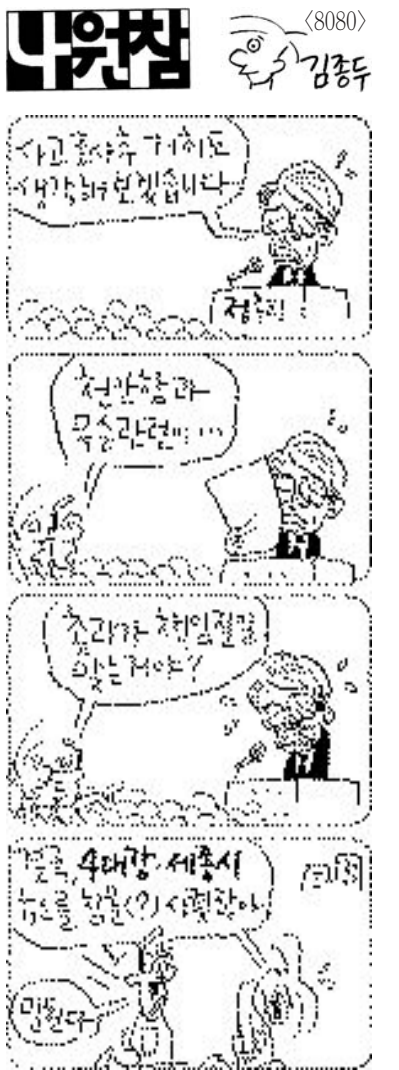
실종자 가족들은 또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해사에서도 생존 승조원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 안에 있었으면서도 ‘배가 왜, 어떻게 침몰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군 당국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실종자 가족들과 생존 승조원들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 출신인 강준 중사의 매형 김철수씨는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만간 다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생존 승조원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배가 인양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보단 배 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장병들의 생사 여부가 중요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3일 고(故)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 발견된데 이어 이날 오후 김태석 상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또 한번 오열하는 등 크게 슬퍼했다.



구청 공무원 우울증 자살

7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한 아파트에 사는 광주 구청 직원 M(36)씨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M씨가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가족·지인 등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대삼호중 인부 또 숨져

크레인 기계에 끼어

7일 오후 3시50분께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운반설비 작업장에서 우모(53)씨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기계에 몸이 끼어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삼호중공업 협력업체인 T기업 소속 용접공인 우씨는 동료 4명과 함께 대형 크레인을 시험 가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기계 조작동이나 신호교환 착오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8일에는 삼호중공업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7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한 아파트에 사는 광주 구청 직원 M(36)씨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M씨가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가족·지인 등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M씨가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가족·지인 등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20분

성형수술 성폭행범 3년만에 ‘덜미’

성폭행범이 얼굴 성형수술을 하고 3년여간 수사망을 피해 오다 광주에서 경찰에 덜미.

경기도 이천경찰청은 7일 전국을 돌며 28차례에 걸쳐 강·절도 및 성폭행을 저지른 허모(44)씨를 광주시 남구 백운동동의 한 원룸에서 불잡아 특수강 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렸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성형수술을 하고 체중도 10kg가량 불려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Seoul Gosihakwon' (서울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for public servants and police officers, and a section for 'MDP Pass' (의사/약사가 되는길) with PEET/MEET/DEET products.